미세먼지 관련 제 비용 '업계 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 · 작업중지명령 강화조치 등 시행

새로운 제도·정책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의 불똥이 애꿎은 민간 건설사로 튀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 작업중지명령 강화조치 등을 도입·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실내작업 우선시행 및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및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방안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장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진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이행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공정 자제에 따른 지체상금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기존에 투입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공해 수준이 낮은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공사의 원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자칫 수익성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도 비용 부담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간 건설사들과 한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도 건설사에 비용을 떠넘기는 건 마찬가지다.

건축법 개정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사는 공정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했을 때,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등을 동영상으로 남겨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을 정한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시장에서 동영상 촬영 비용 등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작 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내리는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도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 제거,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 경우에 한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중지명령 강화 조치가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만큼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법 개정 추진 배경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제도.정책의 도입과 시행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민간 건설사에 떠넘기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적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21일 본부 3층 상황실에서 수출협의회 가입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특히 전북도청 농식품산업과 이경득 주무관과 농협경제지주 수출지원단 김문 팀장을 초청해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시책"및 농협 농식품 수출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는 등 전북도와 전북농협간 상호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외교문제, 장기화된 일본의 엔저 등 농산물 수출의 대내.외 악재를 이겨내고 농산물 3,000만불 수출로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방금원 회장은 전북 농산물 수출 3,000만불 시대를 여는데 전라북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전북농협 수출협의회가 전북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농협은 배, 파프리카, 화훼 등 기존의 효자 품목과 더불어 양파, 토마토, 메론 등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20년 뒤 1인 · 고령자 가구 비율 높아질 듯

1인 가구주 5명중 1명은 70대… 독거노인 수 크게 증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5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45년이 되면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1인 가구주 5명 중 1명은 70대가 되면서 독거노인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6명) 보다 0.07명 많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OECD 회원국 중 9위로, 미국(2.53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구성비는 2015년 기준 27.2%로 OECD 평균인 30.7%보다 낮았다. 캐나다(2011년.27.6%), 미국(2011년.26.7%)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가구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20년 뒤인 2035년에는 서구 선진국보다 오히려 1인 가구나 고령자가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2035년 한국의 1인 가구 구성비는 34.6%로 일본(37.2%)보다는 낮지만 영국(2039년 · 30.7%), 캐나다(2036년 · 30.4%), 호주(26.5%), 뉴질랜드(2033년 · 26.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15년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별 비중은 부부+자녀 가구(32.3%), 1인 가구(27.2%), 부부 가구(15.5%) 순이지만 2045년에는 1인 가구(36.3%), 부부 가구(21.2), 부부+자녀 가구(15.9%) 순으로 바뀐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부터 부부+자녀 가구 비중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가구 유형 중 특히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5년 518만가구인 1인 가구는 2045년 809만8000가구까지 늘어난다.

1인 가구주 연령대는 2015년 30대(18.5%), 20대(17.2%), 50대(16.7%) 순으로 많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2045년에는 70대가 21.5%로 가장 많아진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1인 가구는 초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생긴 젊은층이 많다"며 "하지만 앞으로 1인 가구는 사별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변화 속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모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를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신보, 7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7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동안 채무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특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분할상환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회생지원부(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중기청,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참여기업 모집

전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사업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핵심기술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고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사내 기술인력에게 전수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기업당 사업비는 1,300만원(정부지원금 910만원, 기업부담금 390만원)이며, 현장진단 및 목표설정, 기술전수 지침서 제작, 기술자산화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관리 시스템(http://ww w.innoskill.or.kr)에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44),전북중소기업청(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고창 흥덕농협, 농협 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

고창 흥덕농협이 '2016년 NH농협 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우수한 성과는 세제개편으로 다가온 사업위기의 해법을 손해보험 사업으로 극복한 결과다.

흥덕농협은 전 직원이 단합해 꾸준한 손해보험 이벤트를 기획했고, 보험지식 함양을 위해 전문 강사를 다수 초빙해 임직원 교육을 통해 위업을 달성했다.

이상겸 조합장은 "손해보험사업이야말로 조합원들과 고객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며, "평소 우리농협을 신뢰하고 이용해 주신 조합원과 고객님께 감사드린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NH농협 손해보험 사무소 연도대상은 전국 농·축협 사무소 중 손해보험 추진실적이 우수한 전국 16개 사무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안재용 기자